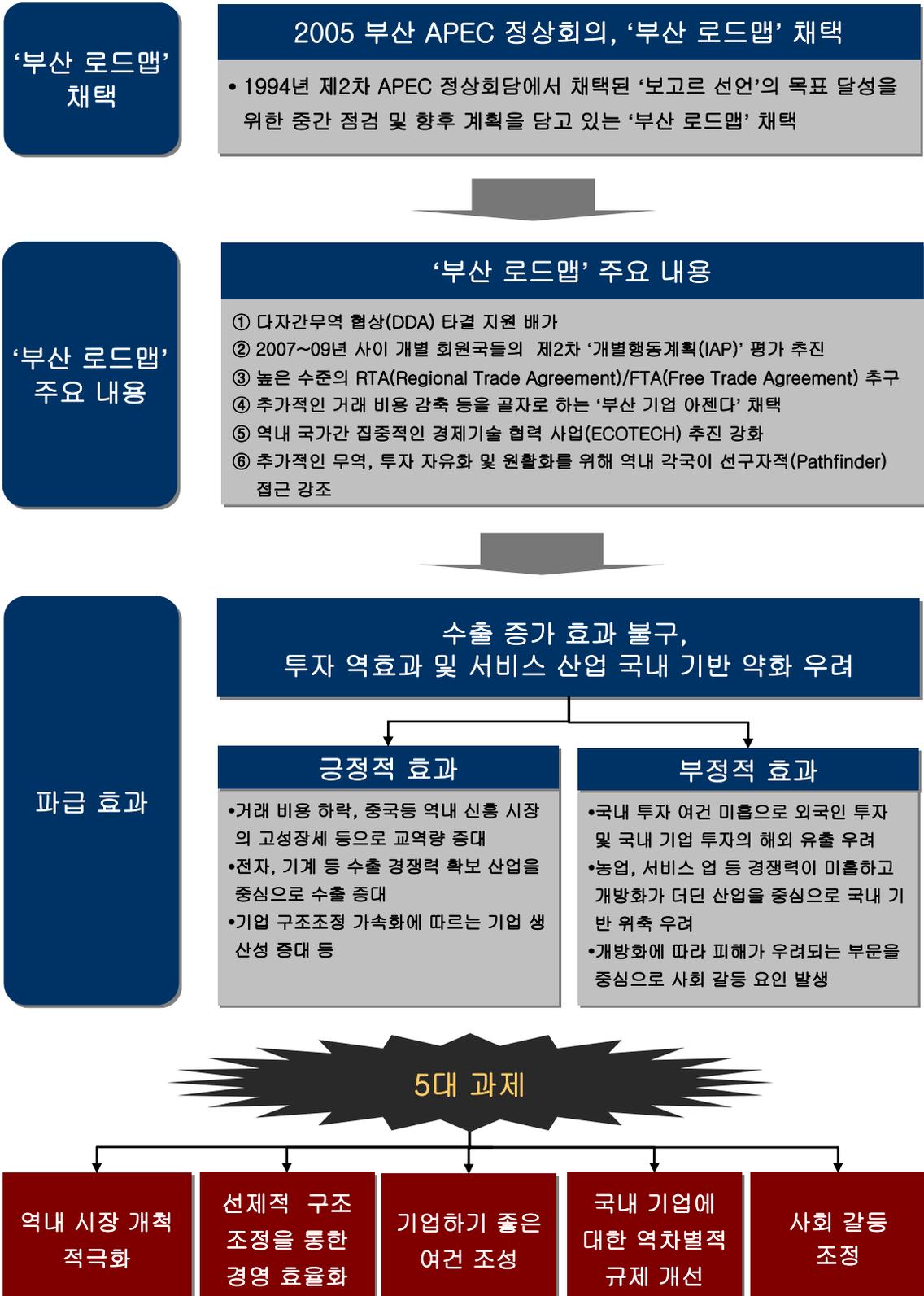


< ‘부산 로드맵’, 투자 역효과 막아야 한다 >



□ '부산 로드맵', 투자 역효과 막아야 한다

- 13차 APEC 정상회의 결산

1. 세계 최대 지역경제공동체, APEC

○ (개요) APEC은 역내 국가 간 경제·사회·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통해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1989년 호주 캔버라(1차 각료회의)에서 출범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공동체임

- 규모 : 2003년 기준 APEC은 전 세계 GDP의 57%, 총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협력체임

· 특히 APEC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73%, 총투자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 더욱이 이미 FTA가 체결된 칠레와 더불어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FTA 체결 추진 대상국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함

- 주요 활동 : APEC은 출범 이후 개방된 다자무역체제의 원칙 하에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TILF), 경제·기술협력 (Ecotech)을 중점 활동 분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참여하는 유일한 협의체로서 북핵, 테러, 자연 재해 등 안보,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음

○ (연혁) APEC은 1989년 창설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간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총 21개국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음

- 출범 이후 고위급 각료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APEC 회의는 1993년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시작함

-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2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은 2010년, 후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부문을 전면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함

- 한편 1997년 말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 당시 지역경제협력체로서 역내 국가들의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신뢰성에 타격을 입음

2. 2005 부산 APEC, '부산 로드맵' 채택

- 2005년 부산 APEC 회의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주제 아래 11월 12~19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개최됨
 - 11월 12일 최종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15~16일 합동 각료 회의, 18~19일 정상회의로 마무리 됨
 - 이번 부산 APEC 회의에서는 21개국 정상, 고위관리 220여명이 참여하며, 각국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 IT 기술 시연 등 다양한 행사 일정이 진행됨
- (2005 부산 APEC 회의의 성과) 2005 부산 APEC 회의에서는 1994년 제2차 APEC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보고르 선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담고 있는 '부산 로드맵'이 채택됨
 - '부산 로드맵' 채택으로 다자간무역체제 지원 강화, 역내 각국의 APEC 합의 이행 감시 기능 강화 등이 예상됨
- ① 다자간무역 협상 타결 지원 배가 :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년 11월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협상 성공을 위한 지원 강화
 - 지난 15~16일에 열린 외교·통상 장관 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특별 성명'을 채택함
 - 이는 그동안 DDA 협상의 쟁점 사안이었던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강도 높은 시장 개방 확대에 관련된 세부 행동 계획을 담고 있음
- ② 개별행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 이행 감시 강화 : 2007~09년 간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제2차 각국별 IAP 이행 사항 평가 추진
 - 현재 개별 회원국들이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개별행동계획(IAP)'을 중립적인 전문가들에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전 회원국의 1차 검토가 마무리됨
 - 부산 로드맵에서는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역내 각국의 합의 사항을 이행 을 진전시키기 위해 2007~09년 사이 2차 IAP 이행 검토를 추진하기로 함

- ③ 높은 수준의 RTAs/FTAs 추구 : 2008년까지 가능한 많은 분야에 대한 역내 자유무역협정의 동질화 모색
- 점차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따른 경제 블록화가 APEC의 '보고르 목표' 달성에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산 로드맵에서는 역내 당사국간 지역무역협정(RTA)/자유무역협정(FTA)을 동질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발굴하여 RTA/FTA가 향후 다자간 무역자유화 확산에 상호 보완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④ 부산 기업 아젠다 : 2010년까지 거래비용의 5% 추가 감축, 포괄적인 기업 원활화 프로그램,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무역 원활화, 반부패, 투자 및 교역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추진
- 기존 관세 철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무역 자유화가 역내 국가간 분쟁의 소지를 제공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부산 로드맵에서는 통관 절차의 복잡성 개선, 국가간 재화·용역 이동에 따른 거래 비용 절감(2010년까지 5%),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업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의 구체적 추진 일정을 설정함
- ⑤ 역내 국가간 집중적인 경제기술 협력 사업(ECOTECH) 추진 강화
- '무역·투자자유화'와 함께 APEC의 주요 활동에 하나인 역내 '경제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로 함
 - 실제로 부산 APEC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 및 관료 회의뿐 만 아니라 800여명의 각국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 행사 개최를 통해 각국간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 ⑥ 추가적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해 역내 각국이 선구자적 접근(Pathfinder) 강조
- APEC이 WTO 등과 달리 구속력이 없는 만장일치제의 다자간 협의체인 점을 감안할 때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데 있어 각국의 선구자적 접근이 절실히 요구됨
 - 이에 따라 '부산 로드맵'에서도 APEC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자발적인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한 선구자적 대응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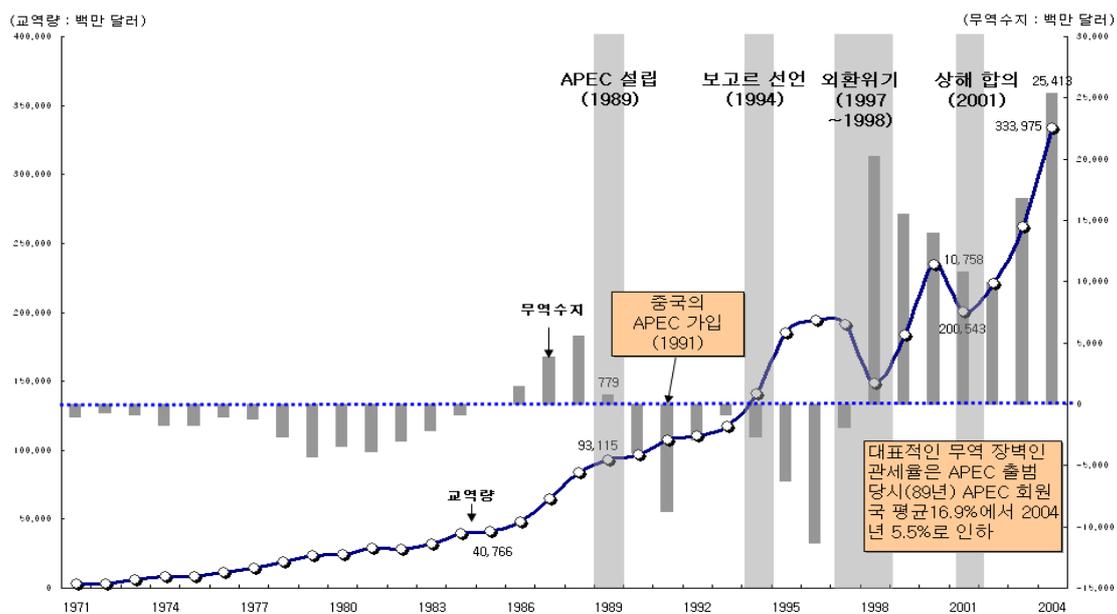
3. 수출 증가 효과에도 불구하고 투자 역효과 · 서비스 산업 기반 약화 우려

○ (과급 효과) '부산 로드맵'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국내 경제는 교역 증대, 산업별 명암 교차, 투자 역효과 우려, 기업 구조조정 가속, 국내 서비스업 기반 약화 등과 같은 과급효과가 예상됨

- 교역량 증대 : 무역 자유화 진전으로 거래 비용 하락에 따른 상품 가격 인하 효과와 중국,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높은 경제 성장세 등으로 우리나라의 역내 교역 활성화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됨

- 과거 추이를 보면 1989년 APEC 출범 당시 우리나라의 APEC 지역내 교역량은 931억 달러에서 2004년 3,340억 달러로 3.6배 증가함
- 이 기간 동안 역내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이 16.9%에서 5.5%로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관세가 폐지되는 것만으로도 큰 폭의 교역 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거래 비용 절감과 같은 비관세 장벽 개선 등이 강화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역내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역내 교역 확대에 따르는 국내 수출 증가는 고용 증가 및 그에 따르는 소비 여력 확충으로 이어져 소비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와 APEC 국가들간 교역량 및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산업자원부.

- 산업별 명암 교차 : 전자기기, 기계 등의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 산업은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농산물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개방화 진전에 따르는 위축이 불가피함
 - 전자기기, 기계 등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역내 무역 확대되는 반면, 농축산업, 원자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수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임
 - 예컨대 선박건조 및 수주, D램 반도체, TFT-LCD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공산품의 경우 무역 자유화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임
 - 다만 고추(270%), 참깨(630%), 마늘(360%) 등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보호되어 왔던 농업 부문은 중국 등의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르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품목별 APEC내 수출 수입(2005) >

(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무역특화지수
		비중(%)		비중(%)	
농림수산물	2,428	1.5	9,912	7.0	-60.6
광산물	11,729	7.2	18,966	13.3	-23.6
화학공업제품	20,524	12.6	17,884	12.6	6.9
플라스틱 및 가죽 제품	4,330	2.7	3,232	2.3	14.5
섬유류	8,184	5.0	4,434	3.1	29.7
생활용품	1,752	1.1	2,117	1.5	-9.4
철강금속 제품	15,555	9.6	19,162	13.4	-10.4
기계류	32,537	20.0	18,544	13.0	27.4
전자전기제품	64,481	39.7	46,365	32.5	16.3
기타	854	0.5	1,858	1.3	-37.0
합계	162,374	100.0	142,474	100.0	6.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1) 대상 기간은 2005년 1~10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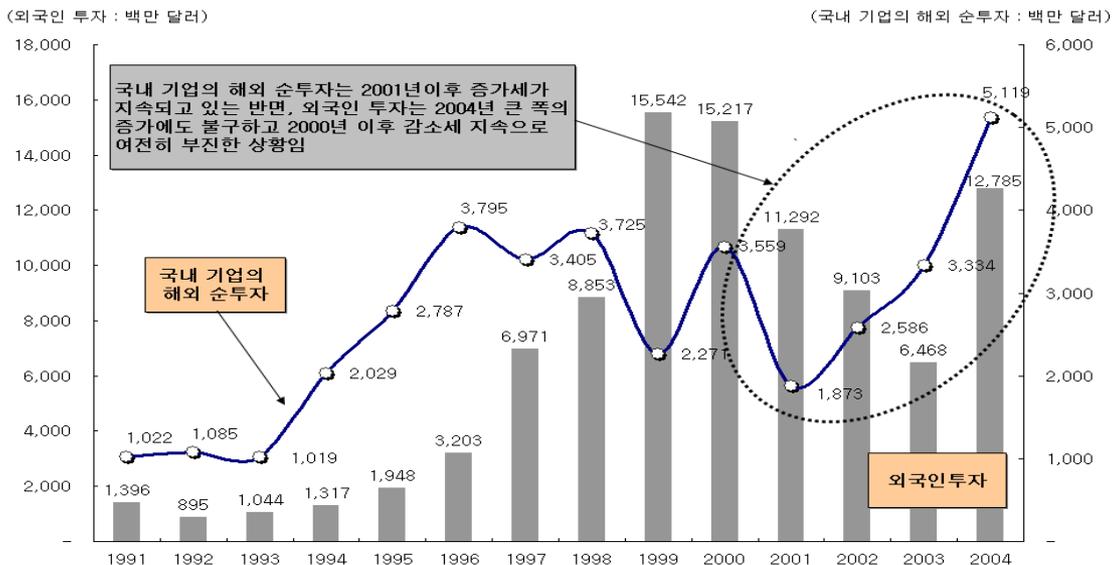
2)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수입)/(수출+수입)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수출 경쟁력이 높고, -100에 가까울수록 수입 의존적인 제품을 의미함.

[참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교역 추이

-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 등의 대 칠레 수출이 늘어난 반면 칠레로부터는 원자재 및 광산물, 농수산물 등을 수입함
- 관세청이 집계한 FTA 체결(2004.4) 이후 8개월간의 대 칠레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가전제품 등으로 이들 4개 제품의 수출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특히 FTA 발효 후 자동차(51%), 휴대폰(191%), 컬러TV(90%)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짐

- 투자 역효과 우려 :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기업인 이동 원활화 등에 따르는 APEC 역내 국가간 투자 활동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 여건 미흡 등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 및 국내 기업 투자의 해외 이전 우려
 - 외환위기 이후 금융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급증 현상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폐지, 자본 및 인적 이동이 자유화되면 국내로 외국 자본의 이동이 용이해져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싱가포르, 홍콩 등 역내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의 투자 환경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역내 투자 수요가 국내와 흡수되는 것을 제약할 우려가 높음
 - 더욱이 취약한, 노동 생산성, 기업 규제,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마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음

< 외국인 투자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순투자 추이 >



자료 :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 동북아 지역 주요 경쟁국의 기업 투자 여건 비교 >

	시장 규모 (십억원)	기업 활동의 용이성	노동 생산성 (달러)	노동 비용 (달러)	물류 비용 (배)	외국기업 에 대한 태도	행정 서비스의 영어사용	종합 평가
한국	350 (3위)	5.49 (4위)	17.59 (4위)	10.71 (4위)	1.82 (5위)	2.86 (4위)	1.8 (3위)	5위
일본	2,640 (1위)	5.65 (3위)	31.03 (1위)	21.54 (5위)	1.16 (2위)	2.56 (5위)	1.56 (5위)	3위
중국	636 (2위)	4.61 (5위)	4.78 (5위)	0.75 (1위)	1.41 (4위)	3.11 (3위)	1.50 (4위)	4위
홍콩	96 (4위)	9.36 (1위)	25.38 (3위)	5.54 (2위)	1.10 (1위)	4.33 (2위)	4.56 (2위)	1위
싱가폴	45 (5위)	8.62 (2위)	26.54 (2위)	7.63 (3위)	1.16 (2위)	4.50 (1위)	5.00 (1위)	2위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장영희,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서울의 경쟁력', 「서울경제브리프 20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12.

- 주: 1) ()는 5개국 순위임
 2) 종합 평가는 UNDP의 HDI(Human Development Index) 지수화 방법을 이용하되 항목별 가중치는 동일하게 부여함
 3) 시장 규모는 민간최종소비지출 규모, 노동생산성은 취업자 1인의 노동 1시간에 대한 GDP 비율, 노동 비용은 시간당 제조업 임금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보상 비용, 물류 비용은 CIF가격/FOB가격임.
 4) 수입관련 물류비용은 수치가 낮을수록 좋음
 5) 외국 기업에 대한 태도 및 행정서비스의 영어사용 수준 항목 평가 대상은 한국은 서울, 일본은 동경, 중국은 상해시를 기준으로 함.

- 기업 구조조정 가속 : 완전 경쟁 체제 도래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대내외 기업간 차별이 소멸되면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내 기업 경쟁 환경이 대내외 기업간 무한 경쟁으로 전환되어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증대될 것임
-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르는 경쟁력 제고 효과가 기대됨

- 국내 서비스업 기반 약화 : 금융·법률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하고 그동안 개방화 진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우려

- 특히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해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시장 개방 가속화로 국내 서비스업 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금융 시장은 선진 외국계 자본이 대규모 유입되어 2005년 10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계일 정도로 국내 자본의 위상이 약화되어 '웬블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웬블던 효과(Wimbledon Effects)란 세계 最古의 역사와 명성을 지닌 웬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의 영국 선수보다는 외국 선수들이 트로피를 석권하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

< 한·미·일 서비스 산업의 부문별 생산성 비교 (2001) >

	한국	미국	일본
도소매·호텔·음식업	9.5	49.8	50.3
운송·보관·통신	30.1	86.4	69.7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46.9	123.6	185.7
사회·개인서비스	21.7	46.0	47.5
교육	20.2	31.6	-
보건·사회적 업무	29.6	44.9	-
기타	11.4	33.2	35.9
서비스업 소계	21.9	66.3	71.5
사업 부문 서비스	21.9	80.4	94.1

자료 : 김홍석, '서비스 부문 생산성,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7호」, 산업연구원, 2005.9.

주: 1인당 부가가치(달러화 기준, 천 달러)임.

4.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 및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노력 절실

- (시사점) '부산 로드맵' 채택으로 APEC의 비전인 무역·투자 자유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된 만큼 향후 시장 개방에 따르는 완전 경쟁 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
 - 완전 경쟁 환경은 기업 경영에 있어 결국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여과 없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비단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나라로 인적·물적 자원이 쉽게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과제) 향후 시장 개방에 따라 기업은 신규 시장 개척 적극화,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등이 요구되며, 정부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사회 갈등 심화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
 - **역내 시장 개척 적극화** : 역내 시장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이 허물어지더라도 현지 수요에 대한 대응, 고부가가치 기술력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 확대 전략이 요구됨
 -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 : 근시일내로 다가온 개방화 파고에 앞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단행하여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완전 경쟁 하에서 생존하는 전제 조건임
 -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인프라 구축 강화, 기업 규제 완화, 외국인 생활 환경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함
 -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 개선** : 시장 개방 진전으로 시장 및 국제 사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기존 규제 중심의 기업 정책을 대내외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으로 전환하여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 갈등 조정** : 개방화에 따르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농업,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사회 갈등 심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황동원 연구원 (3669-4181, dhwang@hri.co.kr)